민실위보고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발 행 인 : 최 성 혁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전화: 789-3883~6 팩스: 782-0135 인터넷 홈페이지: www.mbcunion.or.kr

2021년 4월 13일(화)

우리 뉴스는 시청자의 눈높이를 충족했는가?

유권자의 목소리가 필요한 보도에 "유권자가 없다"

대선 전초전이라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여야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선거에 사활을 걸 듯 언론도 시청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신뢰받고 공정한 뉴스. 시민의 눈높이에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자는 우리 뉴스의 방향이 이번 선거 보도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민실위가 되짚어봤다.

선거 보도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정보제공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이번 선거가 진영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책에 대한 상호 검증보다는 후보자 자질에 대한 공방이 거셌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책 중심'이 아닌 '인물 중심'으로 보도가 이어진 건 아쉽다. 다만 민실위원들은 후보자 자질을 둘러싼 의혹(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박형준 후보의 재산과 MB정부 사찰 등)과 관련해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앞세우지 않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거나, 쟁점과 논란의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조명하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① MB사찰에 쫓겨가(3/22 뉴스데스크, 김재경)
- ② 오세훈 땅 쟁점은?(3/17 뉴스데스크, 이학수)
- ③ 내곡동 진실은?(4/5 뉴스데스크 정참시, 김지경)
- ④ 박형준 부인의 수상한 미등기(3/23 뉴스데스크, 윤파란)
- ⑤ 박형준만 못 받았나?(3/26 뉴스데스크, 나세웅)

그러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슈, 유권자가 진짜 필요로 하고 궁금해 하는 의제에 대해 후보나 정당의 입장과 정책이 실제 부합하는지 이를 따져보는 유권자 중심의 보도에 대해선 사실상 실종됐다고 평가한다. 여당 참패로 결론 난 이번 선거에 대해 우리는 지난 8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민심이 돌아선 이유를 '부동산 정책 실패. 부동산 관련 위선 논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갈라진 20대 표심에 대해선 '취업 역차별, 부동산 폭등 등 미래 불안. 집권세력의 표리부동과 내로남불.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권자를 인터뷰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이대이다 보니까 아기는 낳으라고 하면서 집을 못 가지게 하는 것 같은 아이러니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4/8, 돌아선 민심 리포트 中 시민)

"(방역에) 딱히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일단 생각했고요. 복싱이랑 킥복싱이랑, 앞에 '킥' 하나만 붙었다고 해서 너무 대처하는 방법도 다른 것도 그렇고…" (4/8, 돌아 선 민심 리포트 中 시민)

"오세훈 후보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이었을 때 행보도 그렇고 약간 어떤 여성 의제에 대한 질문이나 환경 의제에 대한 질문 등에 있어서 불충분한 답변을 하거나…" (4/8, 갈라진 20대 표심 리포트 中 대학생)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했었던 그런 당헌들, 만들었던 당헌들도 다 고쳐가면 서 억지로 (후보를) 냈고 그 과정들에서 계속해서 여성 피해자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4/8, 갈라진 20대 표심 리포트 中 취업준비생)

민실위는 이런 분석 보도에서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았던 것과 달리 실제 선거국면에서 우리 보도에서는 "유권자인 시민이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실제 우리보도에서 유권자인 시민의 인터뷰가 나간 사례는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지난 3월 23일부터 투표 전날인 4월 6일까지 선거보도 리포트 41개에서 사전투표에 나선 시민 인터뷰를 제외하고, 유세에 나선 후보자에게 취업준비생이 질문하고 후보자가 답하는 게 유일했다.

"주말 지나면 역전 윤곽" vs "7일은 승리하는 날" (4/3 뉴스데스크 리포트 中)

"다시 대구로 돌아가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서울 학교를 다녀서) 지역 인재가 아니라…" [청년주택 입주 대학생]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시민 몇 사람의 인터뷰가 일반화된 여론이라고 보이지 않기 위해 선거 보도에서 시민 인터뷰는 접근방법에 신중해야 하고 또 제약도 크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타사가지난 3월 25일부터 세대별, 지역별 시민들의 관심사를 인터뷰해 후보들에게 전달하거나, 소상공인·20살 대학생·예술가·장애인 활동가 등을 인터뷰해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 실현 의지를 가늠해보는 기획 보도(민심라이더, 후보만보기 등)을 하며 후보자 중심이 아닌 유권자 중심의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한 것과 대비해 우리는 매우 부족했다.

정책 검증 보도는 도식화된 접근

이번 보궐 선거는 여야의 유력 후보가 3월 초에 결정되면서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할 여력과 시간도 충분한 편이었다. 하지만, 선거 국면에서 우리가 보도한 정책 검증은 지난 3월 15일 집중취재로 '부동산·현금지원 공약에 대한 후보자들의 차이 분석과 현실성 여부'를 보도하고, 기자가 출연해 이를 분석한 게 유일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9426_34936.html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9427_34936.html



민실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정책 검증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후보들 간 정책에 차이점과 재원 마련 등 도식화된 정책 검증에 머물렀다"고 평가한다. 민실위원들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집값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 세입자 보호 강화 등 평가 기준을 정해놓고 후보들의 정책이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미흡하다면 이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따져 묻는 적극적인 검증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성추행' 2차 가해 책임은 사퇴로 마무리

이번 보궐선거가 전임 시장의 성폭력으로 인해 치러진 건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보도는 박원순과 이번 선거에서 20대가 중요 변수로 꼽은 '성평등 이슈'에 대해 여야처럼 선거 공학적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달 17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장에 섰다. 피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전임자 성추행 사건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2차 가해로 인해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당일 우리는 관련 내용을 2 꼭지로 나눠 보도했다. 인권사회팀에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과 사건 왜곡, 2차 가해를 묵인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는 내용을 다뤘고, 정치팀에서는 여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박영선 후보의 출사표 내용 뒤에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는 내용을 리포트 중간에 포함했다. 민실위원들은 해당 기자회견 내용이 정치적으로 해석될여지가 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피해자의 호소에 공감한다. 사과의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지고 2차 가해에 대해 민주당이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기자회견 다음날(3/18일)에 우리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며 2차 가해를 했던 민주당 고민정. 진선미 의원이 선거 캠프보직에서 사퇴한 내용을 동정 리포트에 간단히 덧붙이며 민주당이 거듭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2차 가해자들의 사퇴가 피해자 사과 요구 하루 만에 이뤄진 게 아니라왜 뒤늦은 사퇴인지는 지적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용서에 앞서 제대로 된 사과와민주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의 진정성을 가늠할 잣대인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이후 보도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뒷전으로 밀린 '성평등 이슈'

이처럼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위력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성평등 이슈'를 의제로 설정하는 데 우리 보도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실제 우리 보도에서 이후 여야 후보들에게 권력형 성범죄 재발을 막고 성평등을 실현할 비전을 제시했는지 따져보고 살펴보는 보도는 없었다. 양대 정당이 외면하는 '성평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의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는 소수정당은 개표 전날인 지난 6일 뉴스데스크에 '3위를 위해 뛰는 군소정당 후보'라며 짤막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KBS가 3월 29일에 <소수정당·무소속 후보 공약은?>을 다루고, SBS가 3월 28일에 <군소 후보들도 '표심 공략'…"거대 양당과 달라요">를 보도한 것에 비해 시기상으로 한참 늦은 데다 내용에 있어서도 거대 정당 중심의 보도를 지양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실위는 권력형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 관련 후속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래야 우리를 향해 박원순과 성폭력 이슈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하는 내외부의 시선을 불식시킬 수 있다.

민심이 분노한 이슈에 '우리만 다른 뉴스'

LH 투기 등 부동산 관련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지던 지난 3월 29일.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 통과를 주도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작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법이 제한한 인상 폭의 세 배 가까이 올린 부분이 드러나 경질됐다. 민실위는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이라는 위치와 부동산 규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대차 3법 통과의 취지를 강조했던 그의 언행과 태도를 고려할 때 그의 처신은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내로남불'로 비판받을 사안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를 다루는 우리 보도는 타사와 너무 달랐다. 당일 SBS는 김상조 경질 관련 꼭지를 3개로 나눠 논란 하루 만에 경질된 사실과 김 실장 해명이 왜설득력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 실장을 신속하게 경질한 이유 등을 담았다. JTBC는 비록 한 꼭지로 해당 내용을 전하면서도 임대차 3법 통과를 주도한 그가법안이 통과된 이후 언론에 나와 효과를 장담하던 모습과 대비시켰고, 전셋값 인상에 대한 김 실장의 해명이 14억 가까운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거주 중인 아파트의 실제 전세값 인상분은 5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군색하다고 비판했다.

김상조 '경질'에만 초점...누구의 관점 ?

<고개 숙인 김상조···'전셋값' 논란 하루 만에 경질>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33354_34936.html

이 기사에서 타사와 구별되는 내용은 "다른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김 실장 본인도 전셋값을 올려 줘야 했고, 주변 시세보다 2억여 원 정도 싸게 전셋값을 받았다는 '옹호론'이 나오기도 했다"는 부분이다.



당일 오후에 많은 언론이 관보에 게재된 재산신고내역을 토대로 김 실장 부부가 14억가까운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지만, 취재기자는 '경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14억 예금 보유 팩트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담당 부서장도데스킹 과정상에 14억 예금 보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김상조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건 지난 28일 오후였다. 타사가 29일 아침에 이를 리포트로 소화하고 김 실장의 해명에 대해 반박 증거를 찾으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사이 우리는 당사자 해명을 듣고 더이상 취재를 진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경질에 초점을 맞췄다는 해명도 경질을 결정한 청와대의 입장에서 기사의 방향을 고려한 것이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문제의식에서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기소...우리의 뉴스 가치는?

선거가 끝난 지난 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진석 청 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의혹이 핵심으로,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를 비롯해 많은 언론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고, KBS, SBS는 우연히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보도 뒤에 이번 수사결과를 배치했다.

	방송3사 메인뉴스 아이템(4월 9일)		
큐시트	MBC	SBS	KBS
1			
5	김태현 스토킹 살해 속보		
6	이스타 이상직 구속영장 청구		
8		이스타 이상직 구속영장 청구	
9		'청선가입의혹 이진석기소	
10		김태현 스토킹 살해 속보	
15	'청선가입의혹' 이진석기소		이스타 이상직 구속영장 청구
16	일반뉴스 마지막꼭지		'청선가입의혹' 이전석기소
17			김태현 스토킹 살해 속보
22			일반뉴스 마지막꼭지
24		일반뉴스 마지막꼭지	

위 큐시트 배치에 드러나듯 KBS와 SBS는 청와대와 사실상 여당 의원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를 블록화한 반면 우리는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 고 사태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뉴스 앞 블록에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결과는 뒷 블록에 배치했다. 민실위는 해당 보도를 타사와 다르게 뉴스 후반부에 별도로 배치한 것에 대해 다른 고려사항이 있었는지 편집 부서와 통합뉴스룸 국장에게 질의를 했다. 국장은 "증거 부족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윗선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수사결과를 비중 있게 보 도하는 게 오히려 청와대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뉴스 후반부에 배치했 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사법팀 구성원들은 평소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조명하는 보도 에 있어서는 열심히 의견을 제시하는 편집부가 위 보도에 대해서는 "부실수사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 후반부에 배치한 것에 납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송철호 후보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 6명 이 동원됐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현재 청와대에서 위치를 고려할 때 인권사법팀 구 성원들은 편집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 큐시트는 편집부의 고유 권한임을 존중한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뉴스 내용에 대한 편집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 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짐을 민실위는 우려한다.

'공수처장 관용차 특혜 의혹' 우리만 없었다

지난 4월 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용차특혜 의혹 등 공수처 관련 논란에 대해 우리 보도도 타사와 달랐다. KBS는 공소권을 놓고 검찰과 공수처의 힘겨루기와 함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관용차 제공 특혜 논란을 별도 꼭지로 다뤘다. SBS와 JTBC는 한 꼭지로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보도의 초점은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관용차로 바꿔 타는 모습을 담은 CCTV를 전하며 특혜 논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당일 우리는 "보안을 위한 조치였으며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유의하겠다"는 공수처 해명을 보도 끝에 덧붙이는 걸로 마무리했다. 해당 사안은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을 넘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공수처의 중립과 공정성에서 바라봤어야 하는 사안이었다. 담당부서 데스크는 "오전부터 이성윤 황제 출입 논란을 별도꼭지로 다룰지 고민하다 금요일 뉴스 큐시트가 이미 채워줘 보도 끝에 덧붙이는 걸로마무리했다. 판단 실수"라고 해명했다.

비판은 날카롭게...사실 확인은 철두철미

우리만의 뉴스를 만드는 것은 취재기자와 데스크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리스크 등 여권에 비판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때는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한 적극적인 보도 태도가 필요하다. 신뢰받고 공정한 뉴스를 만들겠다는 포부로신임 통합뉴스룸 국장이 보임된 지 석 달째에 접어들었다. 국장은 지난 1월 정책설명회에서 선거 보도와 관련해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는 품격있는 정치 뉴스'가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원칙에 맞게 향후 정치보도에 있어서 중심을 잘 잡아야한다고 본다. 이번 선거보도 모니터를 통해 민실위는 진실하고 공정하고 유용한선거보도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 동료들의 수고를 결코 폄하할 의도가 없음을밝힌다.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여야 모두 쇄신 정책을 내놓고, 대선 후보 여론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대선 전초전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남은 1년 간 원칙과 중심을 잘 잡아야한다. "MBC는 누구의 편인가?"라는 질문에 "당신이 뉴스입니다"라는 클로징 멘트처럼...